

#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바라며



**안병우**  
충주대학교 총장,  
전국산업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들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I. 머리말

선거운동기간 교육정책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은 후보가 없었지만 실감이 나는 정책을 제시해 주신 당선자에게 신뢰와 함께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소프트웨어를 배양하는 것이며 더구나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는 나라의 발전을 크게 뒷받침하고 우리사회의 지적 밀도를 높여 국민들의 품격을 고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에게는 지금부터 5년 간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추세, 언제 어떻게 불현듯 다가올지 모를 통일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보다 선진된 풍요로운 국가로 들어올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편의상 고등교육 일반에 관한 단상들과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산업대학의 문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고등교육 일반

지난 11월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각 대학 총장들의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분야의 4대 핵심정

책과제와 1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강구, 대학 운영의 자율권보장,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언급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효율화

우리는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여러 부문에서 우위를 확보하여야만 국민소득 3~4만 불의 선진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 1.1%에 절반 밖에 되는 않는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규모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올해 대학 관련 재정규모는 약 1조 원이 증가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4~5년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선진국들과의 투자격차를 다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와 같이 목적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보다는 재정 내부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교육재정도 내부의 흑독한 개혁을 통해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산이 태부족한 여건일수록 교육재정 내부의 비효율요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예산의 구조 재조정 등의 내부 혁신이 있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작년 말 국회예산심의회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고등교육 재정의 증액불가피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세부 사업지출의 내역을 검토하면서 대규모 삭감론이 일어났던 것은 당위성으로만 예산을 배정할 수 없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뚜렷해야 한다는 좋은 반증이 될 것이다.

## 2. 규제와 평가

대학행정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개선과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대학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규제, 여건이 변화되었지만 그대로 방치된 규제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실무자 차원의 사실상 관행적 규제도 있다.

신정부 발족 초기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생각과 사고를 바꾸면 원칙적으로 많은 규제를 털어 낼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법령규제, 사전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에 한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인센티브와 결부하여 시행하면 오히려 규제하는 것 못지않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도 보다 더 정책부서의 면모를 가지고 각 부처를 연계·지휘하는 국가인적자원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3. Nuri사업의 강화

지난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관념적이고 공허한 내용들도 있었으나 지방대학교혁신 지원사업은 가장 알찬 성과를 거둔 성공작이라고 생각된다. 각 대학들이 소속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지 늘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방정부, 지방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는 관행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방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보다 세부적으로 현장의 정책수요를 감안하면서 정책을 확대 개발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나가기를 기대한다.

## 4. 대학통합과 법인화

국립대학 가운데 5개의 통합이 확정되어 완료되었고 2~3개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대학통합은 워낙 복잡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학내외로 소요되는 일이므로 실적을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합에 의한 소기의 성과가 잘 나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단순히 학생 수만 줄여놓은 연합대학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능별 통합(예, 교육 관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통합이 된 후에 학과·학부의 통합도 지난한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지도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법인화문제에 대해 대학사회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하는 대학, 준비된 대학들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되 정부의 규제적 간섭은 대폭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대폭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 Ⅲ. 시급한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 1. 산업대학의 여건변화 및 현황

1982년 산업인력 양성과 산업체근무자, 실업계고교졸업자 등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방대학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그 후 산업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시행 등의 실시로 제도상의 일반대학과 산

업대학의 기능 구별이 없어진 상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교육환경의 변화로 재교육수요가 크게 감소되어 1990년대 초 산업체근로자의 입학비율이 30%에 달하던 것이 2000년에는 12.8%로 줄어들었고 2007년 현재에는 6%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제도상의 산업대 목적은 6%만 남아 있고 94%는 일반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일반대학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산업대학의 숫자도 이제 14개만 남아 전체 대학 수의 3.4%에 불과하다.

## 2. 산업대학체제 유지 시의 문제점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당초 제도가 상정했던 산업대학의 고유기능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특별한 별도의 정부 지원도 없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역차별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대학교라는 학제는 전 세계가 그 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규제적인 법적 구분에 불과하다고 본다.

산업대학만의 고유기능이었던 편입제도, 위탁제도, 특별전형제도 등이 일반대학과 공유되고 이것을 오히려 일반대학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산업대학만의 고유한 독자적 영역은 이미 상실된, 개발년대의 낡은 패러다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대학이라는 법적 구분이 존재함으로써 명시적인 제도적 차별, 행·재정적 차별, 교육기회 및 진로기회의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산업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저하로 인하여 대학 브랜드이미지가 부당하게 손상되고 재학생, 졸업생들의 열등 의식 심화로 자기계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 향후 국민소득 3~4만 불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산업구조에 걸맞는 실용성이 강한 고급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심화과정 및 박사과정 등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 3. 개정안 통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그동안 산업대학들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4년 전에도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는 불운을 겪었다. 작년에는 KIET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고 산업대의 절박한 주장에 공감한 국회교육위에서 의원입법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는 상태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취지에 찬성하고 교육부 당국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1~2년 좀 더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울 중에 있다. 새로운 당선자께서는 본격 가동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의 조속한 검토를 거쳐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산업대학들은 그냥 일반대학으로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반대학으로 전환됨을 계기로 산업대학 시절에 발전·체화시켜 온 산업인력 양성모델을 일반대학이 가질 수 없는 경쟁력 요소로 발전시켜 국가차원의 모델로 정립함으로써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일반대학과 뉴 라운드(New Round)에서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대학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필·자·약·력

#### 안병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사무관(행정고시), 경제기획원 문교예산과장, 예산총괄과장, 예산청장,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주대학교 총장, 전국산업대학교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